

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

- 정부조직법 개정(9.26. 국회 통과, 9.30. 국무회의 의결, 10.1. 공포)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「검찰개혁추진단 (단장 : 윤창렬 국무조정실장^{겸임}, 이하 추진단)」이 10월 1일(수) 공식 출범했습니다.
- 추진단은 국조실·기재부·법무부·행안부·인사처·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됩니다.
-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(정부조직법 유효기간 1년)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,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, ③관계 법률(180여개) 및 하위법령(900여개) 제·개정안 마련,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, 정원 산정, 인력 충원, 청사 확보, 예산 편성,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합니다.
 - 또한,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·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
 - 아울러,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*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 - * 기재부·법무부·행안부 차관, 국조실 1차장, 법제처·인사처 차장 등
-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,
 -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여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※ (참고) 검찰개혁추진단 개요

담당 부서	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장	권대철	(02-2100-2225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빈	(02-2100-2226)

□ 배 경

- 정부조직법 개정(안)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내 검찰개혁추진단 설치
-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,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부터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

□ 추진단의 역할(기능)

- 공소청 설치법,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마련
- 조직 신설에 따른 관계 법률(180여개) 및 하위법령(900여개) 정비
- 신설 조직의 직제, 예산, 청사, 인력 확충, 시스템 정비 등 조직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

□ 추진단 조직 및 인력 구성

[조직]

- 1 단장(국조실장) - 1 부단장(고공단 가급) - 3국(고공단 나급, 기획총괄국·입법지원국·행정지원국) 체계
- 검찰개혁 후속조치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·조정을 위해 추진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 수시 운영
-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

[인력]

- 국조실, 기재부, 법무부, 행안부, 법제처, 인사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 (단장 포함 총 51명 규모)